각당 정책 색깔없는 '도토리 키재기'

고황논단 — 공약에 나타나는 3당 정책 비교·평가

본고는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2기 김의 중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3당후보들의 공약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짚어봄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공약 통한 정책대결로의 변화 엿보여

실천없는 공약 가려낼 유권자 안목 필요

세계질서의 변화과정속에서 우리 나라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는 기존의 대선과는 달리 각 정당 및 후보자가 공약제시를 통한 정책대결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약의 제시가 각 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알리고 인식하게 하여 주고,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남지만, 이러한 정책대결이 선거 형태의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인식할 때 이는 한국정치가 올바른 형태로 변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전제하에 현재 3당이 제시하는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당은 대선공약에서 민자당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약속'을 민주당은 '대화합으로 안정과 번영의 실현', 국민당은 '새시대를 펼치는 새정치를 향하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문구들이 각 당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김영삼후보가 87년 대선에서는 군정종식을 내세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깨끗한 정치, 활기찬 경제, 민생안정을 중점공약으로 하여 6공화국과의 차별성과 이전의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부각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의 김대중후보는 87년 대선의 경우 안정속에 개혁을 내세운데 비해 이번에는 각계각층이 잘 시는 보복없는 정치구현, 민생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성화의 두가지 축으로 구성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뉴DJ 플랜과 연계시켜 광주문제의 해결과 같은 감정적이고 지역적인 공약보다 온건노선을 취함으로써 전 지역 및 계층을 망라한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 국민당의 경우 다른 정당과는 달리 정치공약보다는 경제공약을 전면에 제시하므로써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주장하고, 정주영후보가 내세우는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의 의미도 현재의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이 집권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각 정당에 있어서 정국운영에 관한 공약의 많은 차이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서 나타나는데 민자당은 96년에 실시를, 국민당은 98년 상반기 중 실시를 주장하고 민주당도 정책의장이 96년 상반기 실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90년대 실시를 각 정당이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6세력이 출기차게 주장하였던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에 대해 민자당의 경우 아예 언급이 없고 민주당은 미주질서 보호법으로의 대체 입법, 국민당은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3당의 정치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이다.

민자당의 공약은 실제로 전혀 개혁의지가 없는 공약들이 대부분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안정을 선호하는 유권자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총전의 정치부문에서의 개혁과 새정치 상징의 희석도어 보수정당화되었고 국민당의 경우에는 경제문제에만 매달려 정치부분에서의 정확한 공약의 제시가 없다. 민주당만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진보적인 성향을 내세울 큰 충전의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당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물가안정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가 통계치보다 훨씬 높아졌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30~50%정도) 때문이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3년내 3%이내로 국민당은 1년내 3%이내로 물가안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안정공약이 실제로는 선거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인기영합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3당이 물가안정 가능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5공화국 경우에는 당시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호황이란 특수한 조건이 구비된 경우였고,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 수 있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소홀, 복지정책에 대한 투자의 전무 등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5공화국 때와는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거 비추어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물가안정이 현실성을 무시하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

주택문제의 경우 민자당은 주택보급률을 90%로 높이기 위해 연 55~60만구의 건설을, 민주당은 연 60만구무의 보급을 집권기간동안 300만호 건설을, 국민당은 이 지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속이나 한듯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당 뿐만 아니라 민자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제한된 재원을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모두 어느 분야 충전에서 재원을 본격적인 입장 공급을 다시 내세워 서울은 1/3, 지방은 2/3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공화국에서 200만구무 건설이라는 주요 때문에 부리하게 강행된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지구에서 쏟아진 보상자금이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고, 아파트의 무질공사와 자재가 폭등, 인명산의 부족 및 인간미상승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민자·민주당은 다시 300만호 건설등과 같은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당의 아파트 반값 공급도 현실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며 3당이 모두 제시하고 있는 주택자금의 지원도 재원확보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농어촌공약에 있어서 농어촌부채의 경감은 3당이 공히 내세우는 공약이고 민자당의 경우 쌀수입만 대, 민주당의 경우 쌀·쇠고기등 기간작목의 수입개방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3당은 중소기업육성과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GNP의 5%투자라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약을 본의 희생없이 모든 경제영역에서 성공을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현시점에선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지도자들은 21세기에 도전하는 집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경제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근본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21세기의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경제원리와 제도는 무엇이고, 세부규칙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의 노동공약은 민자당의 경우 현재의 노동법을 개선하는 반향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반면, 민주당과 국민당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의 총연임금제 실시를 폐지하고, 대한노총 이외의 제2노조연합체를 인정하며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도 파업을 제외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공약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기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민당의 경우 총연임금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노조의 정치활동허용과 제3자개입금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재벌당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흔적으로 보인다.

교육문제에 있어서 3당 모두 중학교 의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국민당은 즉각적인 실시를, 민자당은 95년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단계적 확대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각당 모두 이를 위해서 교육비에 투자되는 비율을 국민총생산의 5%까지 높여야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2.6%수준)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법에 있어서는 약속이나 한듯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